

5·18 폼페이·왜곡 망동, 왜 계속되는가

무등칼럼



김종석
이사 겸 마케팅사업본부장

“헌정질서를 파괴하고(12·12)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으며(5·18) 부정부패의 만연을 초래(뇌물수수)하게 했던 암울한 시대의 유물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엄중 구형한다.”(5·18특별검사팀 김상희 주임 검사). 1996년 8월 5일 오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12·12, 5·18 반란 및 내란수괴 혐의’ 공범자들에게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지방법원 101호 대법정. 김상희 주임 검사는 결연하고 도박도박한 목소리로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을 읽어내자 뒤, 내란수괴 전두환 피고에게는 사형, 노태우 피고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호용 피고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광주학살을 주도한 16명의 신군부 장성들도 내란죄 중범으로 기소했다.

헌정 파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내란

필자는 그 날 새벽 1시경 광주 YMCA앞에서 5·18유족들과 만나 비좁은 15인승 버스를 타고 상경, 재판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그 날 이후 비로소 광주가 ‘폭도와 불순세력(북한사주)의 도시’에서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거듭났다. 재판정 안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5·18단체 회원들과 함께 포

옹하며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은 이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됐다.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된 5·18이 23년이 지난 지금 되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관련 망언을 ‘배설물’ 처럼 쏟아냈다.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10년 20년 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면서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중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의 세금을 추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 유공자는 ‘괴물’, 전두환은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차치하고, 그 판(공청회)을 깔아준 한국당의 후안무치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역사적으로 광주가 ‘폭동’과 ‘불순세력의 도시’에서 ‘민주화 성지’로 기록되기까지 보수세력의 협조가 어느정도 있어 가능했다. 민주자유당 노태우는 지난 1988년 ‘광주사태’를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물론 광주를 포함한 민주진영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후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18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그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으로 5·18광주학살 원흉자들이 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어떤 공소사실에도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5·18기념사에서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에서… 5·18 운동을 거친 민주화의 불길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타올랐고 마침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뤘습니다”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마저도 2013년 5·18 기념사에서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들 보수정권의 맥을 잇는 현 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의 5·18 폼페이는 보수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작태다. 한마디로 몰역사적이고, 당의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망동이다.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 결기 보여라

이같은 극우보수 세력들의 계속되는 5·18 역사왜곡 망동은 세 가지에 기인한다. 먼저 ‘극우 보수세력 결집’이 필요한 정치적 상황이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오정치’를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현 북·미간 평화협상 정국에서 북한공격은 한계가 있고 5·18 광주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일본의 자민권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면 ‘협한(嫌韓)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당 집행부는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어쩔쩔 넘어선다. 두 번째는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불명확성이다. 민주당,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누어지면 5·18 폼페이와 망언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뒷북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삭발단식을 마다하지 않고 5·18망언을 일삼는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등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폼페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광주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통합되지 않는 5·18관련단체의 목소리는 극우 보수세력을 독버섯처럼 기생케 한다. 단체들이 분열과 대립에 앞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18진실을 알리는 등 자성과 포용이 절실하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행의 동반자

역사적인 사건, 다양한 문화를 만나는 시간은 잘나조 차 눈을 떴기 아까울 정도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게 되면 담아두고 싶은 욕심에 사진을 찍는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지인은 자제 또한 아름다워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순간 사소한 일로 언어의 충돌이 발생했다. 언어의 충돌은 감정의 충돌로 이어졌다. 여행이 시작될 지 여섯째 날 그 후부터 분위기는 서먹서먹해졌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동행자에 따라 여행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종종 느끼기도 했지만 이렇게 실제 부딪히게 되니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진, 아무리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인데 너무 감정의 소비를 해 버렸다. 함께한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느낀 바를 이야기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쉬움으로 남았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한 지인이었기에 좋은 여행이 될 거라 믿었고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도 이해할 거라 믿었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기대감이 컸던 것일까.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터이니,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진심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호소다. 진심, 진정성은 주관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느 작가의 글이 생각난다. 그렇다. 진심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이다. 진심의 전달과 수용 사이에는 배려와 이해가 꼭 필요했던 것인데 그 순간 생각하지 못했다. 코카서스 여행의 10일 중 끝날 무렵 3일은 너무 불편했다. 그러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 너무 어딘지 못했던 것 같다.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교향악단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어느 한 연주자의 음이 이탈하는 순간 그 단락이 흐트러지면서 불협화음이 시작된다. 각자 맡은 악기를 가지고 자신의 연주에 충실해서 화음을 이뤄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듯이, 여행의 동반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생각하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고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알차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다.

비상구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이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관계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안전 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심만이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훈 (보성119안전센터)**

사설

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 징계아닌 제명해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일삼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서면으로 당사자 소명을 받았다”라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회의를 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리위는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장소를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윤리위는 14일 다시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앞서 지난 11일 여론이 들끓자 사과 및 유감을 표명하고 당 차원의 진상 파악 지시와 함께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 운동”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내 구성원 모두가 완벽히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한국당의 미온적인 대처에 5월 단체 등 시민사회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닌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위해 법률적 대안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상경 투쟁에 나선 5월단체 등은 국회를 방문,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5·18을 왜곡· 폼페하는 파렴치한 망언을 쏟아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 부정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의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 의원들이 국회 뺏지를 그대로 달고 있다면 ‘한국당 해체 운동’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 등은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망동을 일삼는 이들이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당 윤리위가 말 그대로 수준낮은 면피용 징계로 일부러된다면 더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해 섬관광 대박 가능성 보인 신안 천사대교

설 연휴 기간중 임시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연휴 7일간 이용 차량이 무려 4만5천여대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관광객이 65%를 차지해 새로운 전남 서남권 섬관광 명소 탄생을 예고했다. 본격 개통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였다.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는 관광 명소로서 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다도해 섬을 연결하는 희귀성이다 현수교 특유의 간죽미도 장점이다. 길이 10.8km, 너비 11.5m의 대교에서 1004개 다도해 섬의 아름다운 절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봄철 관광이 본격화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밀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내 최장 바다위 케이블카(목포)가 4월 개통을 앞둔 명실상부한 전남 서남해안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할만 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천사대교와 목포 케이블카 개통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에 훈풍이 불 것이다”면서 구체적인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시의적절하고 옳은 판단이다.

흔히 관광을 골목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각 지자체마다 관광 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 서남권은 뛰어난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도 이제까지 관광 사각지

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명물 신안 천사 다리와 목포 케이블카라는 인프라를 갖추면서 전남 관광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물론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우선은 서남권 관광 전체를 묶는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한다. 아무리 먹거리가 풍부하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도 해도 있는 것만 보여주면 금방 식상하게 마련이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와 관광객의 요구를 파악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상품을 기획·출시해야 한다. 천사다리와 목포케이블카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먹고, 자고, 즐기는 토털 관광이 대세다. 전남 관광 6천만 시대는 토털 관광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6천만 관광객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기회는 자주 오게 아니다. 신안 천사 대교와 목포 케이블카는 전남 관광에 새로운 기회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천사대교 임시개통을 통해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함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바다 케이블카를 세계적 명물로 키우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컬처에세이



김현조
광주관광협회 부회장

함께 여행을 갔다. 지금까지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이었던 코카서스 3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일정이었다. 항공편이나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낯선 곳이었다. 얼마 전부터 방송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기에,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진 답사 겸 실제 경험을 위해 지인 몇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다. 처음 만나는 곳 같지만 절로 나오는 경치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힘든 건축물, 숙연해질 만큼의

발언대

비상구, 관심은 키우고 적재품은 치우자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는 비상구 훼손 및 비상구에 쌓인 적재품으로 인해 무려 29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화재였다. 이는 건물의 영업주와 관리자의 비상구에 대한 관리의식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 볼 수 있다. 이후 일 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화재현장에서는 비상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두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불에 의한 사망자보다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자 대부분이며 출입구를 찾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출입구 쪽에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는 2010년 6월 11일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2018년 10월 18일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판매, 운수, 의료시설을 포함 한 복합건축물))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 정책

고령화에 대한 UN의 규정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 불리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다. 특히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불리는데 이때가 되면 경제적 문제점들이 많아 복지정책은 물론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돼 2020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시기도 2025년으로 예측돼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프랑스가 115년, 영국이 91년, 미국 88년, 일본은 36년에 걸쳐 고령화가 이뤄졌지만 한국은 25년여 만에 급격히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는 예측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생산인구 감소다. 생산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성장률도 감소하게 되고 동시에 구매력 높은 소비인구까지 줄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노인층 부양과

복지재정 문제도 심각한 이슈가 된다.

사실 노인층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효율 따져 보더라도 지하철 적자의 절반 가까이 이끈다는 통계는 사회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노인층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볼 노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의 68%가 무임 승수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광주지하철 하루 이용자 5만 5천 여명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32.7%에 달해 매년 300억 원 이상을 광주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세금을 낼 경제활동 인구는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세대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 경제성장률이 이뤄질 수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전후 세대도 태어나 대한민국 경제성장 한 가운데서 한 평생 고생해 온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인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 정책 또한 현명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도철 사회부 부장 douls18309@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 10일 창간 |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 주필 **김영태** |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재봉로 324(충효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 정자부 062/606-7722 | 경제부 062/606-7713 | 사회부 062/606-7730 |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 사진부 062/606-7762 | 뉴미디어부 062/606-7760 |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시방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